

친일과 과거청산

—이완용의 제국주의 협력논리를 중심으로

이나미

들어가면서

국회에서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시금 친일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주제를 다룬 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토론자는 일제가 고종에게 공작의 작위를 주려고 했을 때 이완용이 결사반대하여 고종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친일파 이완용만 알려져 있지 이완용의 이러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과연 이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친일파 이완용이 아닌 다른 그의 면모가 밝혀질까. 이는 이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 전체에 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완용이 '구제' 된다면 다른 친일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완용은 가장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친일파이다. 따라서 '이완용 재평가론' 뒤에 숨어 있는 이러한 함의를 잘 간파하고 그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이완용이 고종에게 충성하였다는 것은 그가 보수주의자라는 것과 고종과 친분이 깊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군주

제·봉건제에 근본적인 비판의식이 없는 보수주의자로서 과거 습관대로 왕을 모셨다. 부친 제사도 열심히 지내는 효자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태도로 일본 천황에게도 충성을 바쳤다. 그는 갑신정변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개화지식인들과의 사이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¹ 개화파들이 일본과 서구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그 국가들이 문명국가였기 때문이었지만 이완용이 일본 편에 섰던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패권을 장악해 갔기 때문이었다. 즉 항상 강한 세력 편에 서서 안정과 실리를 지향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편에 서서 실리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이다.

또한 그가 고종 개인에게 충성했음지는 모르지만 국권을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고종에게 충성한 것은 아니었다.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일이 발각된 후 감히 아무도 나서서 하지 못한 고종의 양위를 이완용은 앞장서서 추진했다. 그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심지어 칼로 고종을 위협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그는 적극적으로 고종을 몰아내는 데 공헌했다. 이는 당시 어떤 친일파도 나서서 하지 못한 일이었다.

고종 양위뿐 아니라 일제가 조선을 합병해 간 과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완용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본에 조선을 합병할 것을 먼저 제의하였다. 이 제의를 받은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는 '그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뛰어들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합병으로 가게 된 전 과정, 즉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등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는 대신들과 고종을 설득해 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이완용뿐 아니라 나약한 고종과 무능한 대신들에게도 합병의 큰 책임이

1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그가 결국 개화인사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윤치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75.

있지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것과 용의주도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나라를 넘긴 것 사이에는 질적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이렇듯 일제의 조선합병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당시 일제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축소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 한일합병은 일제의 잔인한 의병운동 진압과 황실에 대한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의병들은 구한말부터 합병 전까지 전국에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합병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에 의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합병에 반대하는 민중의 유혈투쟁이 이어졌다. 우리 역사를 보건대,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엘리트들이 망치면 민중이 수습하는 역사를 가졌다.

이완용 연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일파 옹호론 때문이다. 그러한 책들의 제목에 달린 ‘변명’과 ‘변호’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조심스럽지만 과감한 친일파 옹호론을 펴고 있다.² 저서뿐 아니라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겨난 상황이다. 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생겼는가.

우리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친일파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이는 친일파가 학계를 비롯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친일 연구를 쉽게 할 수 없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일파 1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친일파 옹호론은 이러한 본격적인 친일파 비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제국주의 옹호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신우익의 출현이 목격되고 있다. 독일 역시 1980년대 말부터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나치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고 하버마스와

2 예를 들면 북거일의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들린아침, 2003), 김완섭의 『친일파를 위한 변명』(춘추사, 2002) 등이 있다. 김완섭의 저서는 같은 해에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같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³ 그런데 우리 학계의 경우 역사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친일 옹호론에 대한 대응이 없다. 물론 친일 옹호 논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 수 있으나 친일 또는 제국주의 협력 논리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무지막지한 자본의 힘과 지지로 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의 흐름

이완용에 대한 글은 매우 적다. 이는 그의 악명이 가져다 주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소수의 글들이나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공통적인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네 시기, 네 주제로 나뉜다. 우선 해방 직후부터 60년대까지로, 이 시기의 이완용에 대한 글들은 주로 그의 죄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회복의 「이완용일당매국죄악상」(《삼천리》, 1957. 4), 이현종의 「한일합방 전야와 매국주구들 : 寺內統監 그늘 속의 독버섯 이완용 · 이용구 · 송병준의 죄상」(《사상계》, 1964. 4)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중순부터 1990년대 초까지이다. 이는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그에 관한 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글들 역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친일뿐 아니라 친미, 친러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행선의 「친미 · 친로파로서의 이완용 연구(1858-1904)」(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박영석의 「‘이완용’ 국제감각 지닌 천부의 기회주의자」(《광장》, 1986. 3), 이이화의 「이완용의 곡예 : 친미, 친로에서 친일로」(《역사비평》, 1992. 6), 박치문의 「이완용의 대외인식 변화와 친일논리 연구」(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논문, 1994)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글들은 과거의 그의 친일 행위에

3 구승희, 『논쟁 나치즘의 역사화?』, 온누리, 1993, 19쪽.

대해 죄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 보다 종합적으로 그의 친일 행위뿐 아니라 친미, 친러 등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는 1999년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중심, 1999)과 이에 대한 서평들(한철호,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반성의 역사」, 《황해문화》 12호, 1999; 《동아시아비평》 4호, 2000)을 들 수 있다. 윤덕한의 책은 이완용을 재평가하는 저서로, 1927년 이완용의 생질이자 비서였던 김명수가 펴낸 『일당기사』 이후 이완용에 대한 저서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완용에 대해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다는 점 또한 이완용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한일합병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려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한철호의 서평에 의해 책의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철호가 지적한 바대로 저자의 집필의도가 결국 저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⁴ 저자의 집필 의도는 그가 왜 독립협회 활동과 같은 애국적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독립신문》이 그토록 찬양한 이완용이 왜 친일로 전향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저서의 내용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자가 독립협회를 애국적 단체로 미리 규정하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여겨진다. 독립협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따라서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이 이완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완용이 속했던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재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간행된 친일파를 옹호하는 책들과 인터넷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완섭의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 카페 “더러운 코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책들과 사이트는 이완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를 포함하여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한다.

4 한철호,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반성의 역사」, 《동아시아비평》 4호, 2000, 68~70쪽.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의 의미와 흐름

김승국

서론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뒤에 한 첫 조치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기를 꺾기 위한 ‘팔루자 공세’였다. 이는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팔루자 공세’를 되받아치기 위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반격이 자이툰 부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은 한미 동맹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장래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노 대통령은 (파병을 조르는)미국과 (파병에 반대하는)시민사회운동 진영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머물다가 추가파병을 단행했다. 파병 반대운동 세력이 보기에는 ‘쫓대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쫓대 없는 지도자가 노 대통령뿐일까? 해방 이후 역대의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No”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대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민족은 13세기 후반의 고려 때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7백여 년간 다

른 민족의 군대와 공동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파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선왕조는 1467년에 명나라로부터 여진족을 징벌하기 위한 파병요청을 받았다. 조정에서 활발한 찬반논의가 일어났다. 마치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요청을 받은 노무현 정권 내의 당정 사이에 찬반논의가 일어난 것처럼.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으므로 파병을 거부하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파병을 할 경우 중국 대륙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여진족(여진족이 나중에 청나라를 세움)의 미움을 사게 되어 장차 국익에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신중론(파병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이 들고 일어났다. 15세기 중엽의 '파병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펼친 사람들은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펼친 열린우리당 쪽 파병반대 의원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파병과 관련된 권력 내부의 밀고 당기기(파병찬성 우위 측의 소수파 반대론의 문제 제기)가 지금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시 정효종(鄭孝終)이 낸 파병반대 상소가 임금에게 올라간 다음에 파병의 시기가 늦춰진다. 열린우리당 쪽 파병반대 의원들의 서명에 영향을 받은 청와대가 파병시기를 우물쭈물 늦춘 것과 비슷하다. 그 당시 유생들의 파병반대 상소와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단체들의 서명운동을 엇비슷하게 보면 물역사적인 평가인가?

어쨌든 조선군은 파병을 단행했으며 그 대가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 왜군을 격퇴한다. 그 뒤 조선을 살려 준 명나라에 대한 보은론(報恩論)이 청나라 배척운동으로까지 비화되고 정묘호란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 준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명나라에 대한 보은론과 일맥상통한다. 조선왕조의 보은론이 모화론(慕華論 - 숭명배청(崇明排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21세기의 보은론은 모미론(慕美論: 미국을 흠모하는 논리) - 숭미배북(崇美排北: 미국을 숭배하되 북한을 배척하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파병을 요청하는 나라가 명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외세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후 권력 내부에서의 행태는 어찌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같을까? 파병이라는 국가 대사大事, 대외정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행태가 고금을 불문하고 닮은 꼴인 이 땅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고려 이후 지속되어 온 사대외교의 맥락에서 파병 반대운동을 거론하는 역사적인 천착이 요구된다.

역사 속의 파병 반대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 때의 반전운동을 살펴보는 게 현명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전 파병 당시 한국의 재야는 침묵했다. 베트남전 파병과 거의 동시에 진행된 한일회담에 반대했던 야당계 언론, 《사상계》 등의 잡지도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았다. “《사상계》를 끼고 다니지 않는 지성인은 간첩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계》마저 침묵했다. 《사상계》 등은 ‘베트남전 파병의 대가를 미국에서 얼마나 확보해야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을 뿐, 요즘의 《한겨레 신문》처럼 파병반대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았다.

이는 ‘1960년대의 세계정세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당시 재야 지도부의 몰이해, 베트남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결여에 기인한다. 1960~7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직 사건(인혁당 사건, 통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의 공소장이나 해당 조직의 강령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논리’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한국 재야의 침묵은 그 당시 일본의 반전평화투쟁(안보투쟁)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1960년대에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이 만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재야가 베트남전 파병에 침묵한 후유증(?)은 70년대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중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에도 베트남전 파병반대-반전평화의 깃발을 든 조직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은 파병 반대운동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필자는 한국 평

화운동의 이렇게 '당돌한 성장'에 찬사를 보내며,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운동의 흐름을 분석한다.

본론

운동론이 없는 운동은 맹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파병반대 운동론을 먼저 거론한다. 필자는 파병반대 운동론을 'C(Civil Democratic Revolution)·N(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P(People's Democracy)론'으로 집약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앞의 'C·N·P론'을 통하여 80년대의 CNP 논쟁을 부활시킬 의도는 없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운동권에서 지금도 혁명을 꿈꾸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80년대 CNP 논쟁의 목표인 '혁명(Revolution)'은 잊혀진 꿈이다. 그러나 'Civil...', 'National...', 'People's...'는 아직도 운동진영에 메아리치고 있다. 현재의 파병반대 운동권에서도 20년 전 CNP 논쟁의 수맥이 'Civil...', 'National...', 'People's...'의 형태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주목한 필자는 파병반대 운동론과 운동의 주체를 'Civil...', 'National...', 'People's...'로 3분하여 운동의 흐름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운동의 주체가 없는 운동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C·N·P론'을 합성한 <국민행동>(351개의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결합한 파병 반대운동의 구심체)을 운동의 주체로 설정한다. 운동의 주체를 더 세분하여 C론(Civil...) 쪽을 'C 그룹', N론(National...) 쪽을 'N 그룹', P론(People's...) 쪽을 'P 그룹'이라고 부른다.

C 그룹은 평화운동의 보편적인 가치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려고 한다. C 그룹은 이라크인의 평화적인 생존권·인도주의·인간 안보에 반하는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양심적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C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참여연

대(평화군축 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으로 이들은 평소에 시민사회의 인간 안보(Civil Security/Human Security) 차원에서 '시민(시민사회)의 평화(Civil Peace)'를 창출하려고 한다.

N 그룹은 '반전-평화-자주(반미)-통일'의 입장에서 파병 반대운동에 임한다. N 그룹은 '반전-평화'에서 C 그룹과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하지만 '자주-통일'에서 C 그룹과 갈라선다. 반전평화운동과 미국 비판·반대(반미운동)를 연결시키려는 N 그룹과 그냥 평화운동을 향유하려는 C 그룹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운동을 연결시키려는 N 그룹에 대하여 P 그룹의 일부가 '반미=반제국주의' 차원에서 동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P 그룹은 "N 그룹이 민족주의에 따라 반전운동과 반미운동을 연결시키려 한다"며 경원시한다.

민족의 안보(National Security) 차원에서 반전평화운동에 접근하려는 N 그룹의 대표적인 단체는 〈민주노동당 내의 이른바 'NL파(민족해방파)'〉, 〈통일연대〉, 〈한총련〉,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다. N 그룹은 '평화운동의 통일운동으로의 접맥'에 큰 관심이 있다. N 그룹 안에서도 미국 반대-연북(북한과의 연대)의 배합을 놓고 약간의 편차가 있다.

한편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 노동자를 수탈하는 '전쟁 지향적인 독점자본/신자유주의'가 있다는 것이 P론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시대에 노동자를 착취한 자본가, 초국적 기업, 금융독점자본, 군수자본이 전쟁체제의 맹주이므로, 이들을 규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반전평화운동을 벌이지는 게 P 그룹의 주장이다. P 그룹이 보기에 노동자(민중)들이 등 떠삼고 배부른 게 최고의 안보이다. '민중 안보(People's Security: 일부 계급환원론자들은 Proletariat's Security)'를 이룬 민중의 평화(People's Peace)·노동자(Proletariat)의 평화를 구가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P 그룹은 역설한다.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반제(제국 '미국' 반대)-반전-평화운동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P 그룹은 N 그룹과 연대해 왔다. P 그룹에는 〈민주노동당 내의 이른바 ‘PD파(민중 민주주의파)’〉,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 사이의 시각편차는 N 그룹 내의 편차보다 더 두드러진다.

위와 같은 운동론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C·N·P 그룹은 〈국민행동〉의 기치 아래 자연스럽게 모였다. 그럼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파병 반대 운동의 흐름을 설명한다.

1. 파병반대 운동의 흐름

이러크 추가파병 반대운동의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서술한 다음에 평가를 내리는 형식이 좋을 듯하다. 이 작업을 위해 〈국민행동〉 홈페이지(<http://www.antiwar.or.kr/index.php>)에 실린 내용과 《한겨레신문》을 기초자료로 이용했다.

2003년 9월부터 시작된 추가파병 반대운동은 상당히 심한 굴곡을 그리며 단속적으로 진행된다. 1년 이상 끌어 온 운동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한다. ① 제1단계(발흥기): 운동이 발흥한 2003년 9월~12월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제2단계(동면기): 운동력이 뚝 떨어진 2004년 1월~4월의 동면기이다. ③ 제3단계(재고양기): 운동이 다시 고양된 2004년 4월~8월의 재고양기이다. ④ 제4단계(소강기): 2004년 8월의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에 나타난 소강기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밀물기와 썰물기로 나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번의 파병반대 운동은 밀물기 없는 발흥기를 거친 다음 급격한 썰물기(동면기)를 딛고 일어나 재고양기를 보였다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엿보이는 양상 즉 발흥기→동면기→재고양기→소강기를 나타내고 있다.

1) 제1단계(2003년 9~12월)의 운동 양상

시민사회 운동권은 2003년 9월 16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에 발 빠른 대응을 하면서 35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국민행동>을 9월 23일에 출범시킨다.

<국민행동> 출범 이후 제1단계 기간의 운동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2003년 10월 18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이라크 파병 원칙을 발표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운동을 전개했다.
- ② 2004년 9월 27일의 국제 반전 공동행동의 날, 10월 25일의 전 세계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에 맞춰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 대열에 합류한다. 이는 반전평화 국제연대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③ 10월 18일, 정부가 이라크 파병 의지를 표명하자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 비교적 강하게 일어났다.
- ④ 11월 30일, 오무전기 직원의 살해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충격을 받은 국내 운동단체들은 '서희·제마 부대도 철수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⑤ 12월 4일, 노대통령·4당 대표 회동에서 '3천 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 담당 부대'를 보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으나 미흡했다. 정부는 '총선 이후로 파병을 연기한다'는 연막작전을 펼치며 파병을 향하여 집요한 발걸음을 떼고 있었으나 시민사회 운동권은 거꾸로 대응력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범민련 쪽 원로들이 12월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칼바람 속의 노상단식을 결행했다. 필순 원로들의 생명을 건 노상단식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동력이 되살아나지 못하여 파병반대 운동 진영은 긴 겨울잠에 빠졌다.

그러면 파병 반대운동의 논리는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국민행동>이

2003년 10월에 발표한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보내서는 안 되는 12가지 이유」에 나와 있는 운동 논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명분 없는 전쟁, 거짓으로 점철된 침략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② 미국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 ③ 한국의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
- ④ 전투병 파병은 미래의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⑤ 전투병 파병은 미군을 도울 수도,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다.
- ⑥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파병이 아니라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이다.
- ⑦ 전투병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 ⑧ 전투병 파병과 한반도 안보문제는 별 관계가 없다.
- ⑨ 이라크 재건 특수를 노리고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⑩ 파병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반대급부는 환상에 불과하다.
- ⑪ 유엔 결의도 여러 가지이다. 점령군을 지원하는 다국적군 파병은 있을 수 없다.
- ⑫ 미국 압력 때문에 한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왜곡되는 것만큼 중대한 국익손실은 없다.

<국민행동>의 복잡한 논리와 달리 국민적인 차원의 파병찬반 논의는 '명분과 실익(국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파병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미국 보은론+정치적 실익(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정치적인 실익)+경제적 실익(파병을 거부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을 받는다)을 내세웠다. 이에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명분론(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으로 맞섰다. 국민들 사이에서 현실주의자와 명분론자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파병'이 국민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를 자임한 <국민행동>이 범국민적인 논쟁을 유발하면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바람에

운동의 전선이 협소해진 느낌이다.

파병 반대운동의 전선이 협소해진 이유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한겨레신문》(2003. 9. 22)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투병 파병반대 여론이 58%(파병찬성 38%)로 초반부터 반대운동에 유리했다.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더욱이 여권의 일부에서 파병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도 연대할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이런 호기를 놓쳤다.

한편 한나라당, 조·중·동, 우익 단체들이 ‘파병반대하면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등의 논리를 유포했는데 이 논리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전선이 협소해지는 데 한몫을 했다.

〈국민행동〉의 긴 이름인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의 목표를 ‘전투병 파병 반대’에 국한함으로써 운동전선을 스스로 좁혔다. 정부는 ‘재건·평화 부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대민활동(민사업무)에 주력하므로 전투병이 아니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했다. 〈국민행동〉이 운동의 목표를 ‘전투병’으로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재건·평화 부대 파견론’을 통해 빠져 나갈 구멍을 운동권 스스로 만들어 놓는 실책을 저질렀다.

2) 제2단계(2004년 1~4월)의 운동 양상

2004년 1월 6일, 〈국민행동〉이 ‘2004년 투쟁 선포식’을 갖고 운동력을 복원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때에도 국회 앞에서는 통일연대·재야운동 단체 소속원들이 범민련 원로들의 노상단식에 합류하는 단식행렬이 계속되었으나 언론이나 운동권의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원로들이 운동의 동면기를 막아 보자고 분투했으나 헛수고에 그쳐 동면기로 들어갔다.

파병 반대운동이 동면기로 진입한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행동〉 등의 투쟁대오가 흐트러졌다.

- ②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겹도록 논란만 반복한 파병 논의에 식상했다.
- ③ '파병' 담론이 총선 물갈이 · 대선 자금 등의 정국 현안에 묻혀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 ④ 여기에 <2004 총선시민 연대>와 <물갈이 국민연대>가 낙선 · 당선 운동에 돌입함으로써 <국민행동>의 주력부대인 시민운동 단체들이 파병 반대 운동에 전력투구할 수 없게 되었다

3) 제3단계(2004년 4~8월)의 운동 양상

2004년 4월, 길고 긴 동면을 마친 파병 반대운동은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운동이 다시 고양된 요인은 <국민행동> 안에 있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외부 요인에 있었다.

- ① 2004년 4월 8일, 한국 목사 7명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된 사건에 대한 우려가 파병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 ② 4월 초부터 이라크 팔루자에서 무고한 민중에 대한 미군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한 반미감정이 '미국이 강요하는 파병반대'의 정서로 이어졌다.
- ③ 4·15 총선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며 이들이 속한 당 안에서 파병반대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 ④ 4월 18일 정변이 일어난 스페인의 정부가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발표한 다음에 각국의 이라크 철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⑤ 4월 28일에 폭로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미군 교도소에서의 성학대 사건이 부도덕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정서를 고양시켰다.
- ⑥ 한국군이 파병되면 '제2의 베트남전 파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⑦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 미국 앞에서 찢찢매며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짓대 없음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 ⑧ 미국이 밀리는 이라크 내전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 ⑨ 진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미국이 추악한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미국을 도와 주러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서가 형성되었다.

위의 9가지 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파병 반대운동이 저절로 고양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제 파병 반대운동의 불을 붙이기만 하면 저절로 타오를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세는 <국민행동>으로 하여금 흠어진 대오를 추스려 파병 반대운동의 촛불을 대중과 함께 들도록 했다. 운동력을 외부에서 수혈 받은 <국민행동>은 2004년 4월 24일 확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운동계획을 결정했다. 드디어 5월 3일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원로와 학계, 종교·여성·교육계 인사 등 10,571명의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비상 시국선언을 발표한다.(이때부터 기존의 '파병반대' 구호 대신 '파병철회' 구호를 내건다) <국민행동>은 또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과 대규모 반전 촛불시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5월 14일부터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이 열리게 되었다. 이어 탄핵무효 촛불시위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민중의 힘'이 파병반대 촛불시위로 다시 나타난다.

민초들이 든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로 복귀한 노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밀려 파병찬성 쪽으로 기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시위대중은 파병반대의 촛불을 더욱 힘차게 들었다. '노무현을 구제한 탄핵무효의 촛불'이 '(파병강행하는)노무현을 규탄하는 촛불'로 바뀌는 '촛불시위의 암전暗轉'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5월 22일의 파병반대 촛불집회는 너무나 쓸쓸하여 '또다시 파병

반대운동이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한국·미국 정부의 파병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는데 반대운동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5월 3일 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운동전선을 재정비한 지 20일 만에 운동력이 쇠진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6월 들어와서도 파병 반대운동의 촛불은 명맥을 유지했으나 왕성하게 타오르지 못했다. 힘을 잃어가는 촛불을 되살린 것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이다. 6월 21일 김선일 씨가 피랍되어 참수당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는 파병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빗발치게 내고 평화문의 촛불시위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틀 뒤 김 씨가 참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병 반대운동의 열기가 급상승했다. 김선일 씨의 참수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담화에 격분한 일부 시위대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파병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 퇴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국민행동> 안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한다. '노사모' 안에서도 파병철폐 논란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파병 반대운동의 열기가 급상승한 분위기를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때 가장 기동력을 발휘한 쪽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6월 23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으며 7월부터 총력투쟁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7~8월의 파병 반대운동 전선의 중심에 민주노동당이 있었다.

7~8월 파병 반대운동의 전선을 형성하게 한 매개체는 김선일 씨를 추모하는 촛불이었으며 가장 대중적인 구호는 “김선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였다. 헛되이 죽고 싶지 않았던 김선일 씨가 납치되었을 때 던진 외마디 “조국의 동포여,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여, 부시여, 제발 이것은 당신의 실수입니다”가 시위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어 김선일 씨 장례식이 있던 6월 30일에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추모시

위에 참여한 다음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운동의 대오를 다시 정비해야 할 형편이었다.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급상승하던 운동의 기운이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였다. ‘파병반대-반전평화의 여론은 비교적 높는데 파병 반대-반전평화 행동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는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파병 반대운동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파병 반대운동의 방법론·방향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운동이 약간 소강상태에 빠진 7월 10일은 비교적 적은 숫자의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과 충돌하여 일부 시민이 다쳤다. 이날 촛불시위에 앞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 <사회진보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은 탑골공원에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열어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강행할 경우 정권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의 ‘노무현 정권 퇴진’ 구호가 <국민행동>의 노선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퇴진 구호의 정치성을 고려할 때 비상한 관심을 끌 만한 것이었다. <국민행동> 소속 단체의 일부와 일부 시위대중 사이에서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내세우지 않는 운동 방향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부산항 8부두에서 파병부대용 군수물자를 선적하는 등 파병 전야가 임박함에 따라 반대운동 진영의 지도부는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한다. 단식의 선두에 선 사람은 민주노동당 대표였고 <국민행동>이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집단적인 단식(10만 릴레이 단식)을 주도했다. 그런데 결사적인 단식농성을 우롱이라도 하듯 8월 3일에 자이툰 부대가 도둑 고양이처럼 이라크를 향해 빠져 나갔다. 단식하다가 쓰러진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가 병상에서 말하듯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몇 달 뒤면 후회할 일이고, 몇 년 뒤엔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이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파병이 단행된 것이다.

8월 3일 파병되던 날 청와대 앞 시위장에서 ‘파병강행 고집하는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 안전에 없는 노무현은 퇴진하라’ 는 등 그동안 파병반대 집회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정권 퇴진’ 요구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4) 제4단계(2004년 8월 이후)의 운동 양상

8월 28일 자이툰 부대의 본대가 ‘도둑 같이’ 이라크로 빠져 나간 다음 밀물 같던 운동력도 ‘도둑 같이’ 빠져 나갔다. 지난번의 1차 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운동력이 급락한 사태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9월 초부터 나타난 운동의 소강기에 정부는 파병연장(내년 연말까지 파병기간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운동의 난관이 증폭되고 있다. ‘도둑 파병’에 이은 ‘파병 연장’ 움직임은 파병 반대운동 세력에게 비상한 긴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응집력 있는 반대운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2. 운동 틀의 문제점

이번 추가파병에서도 운동권의 고질병인 ‘백화점식 운동’의 옥상옥^{上上} 屮인 〈국민행동〉 아래에서 ‘거품형 운동’이 벌어졌다. 몇 년 전부터 전국적인 사안이 터질 때마다 시민사회 운동권 전체가 모여 ‘범국민 운동본부’를 급조하여 운동을 해 온 틀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범국민 운동본부’가 워낙 급하게 꾸려지고 운동의 급박함 때문에 내부 정비의 소홀, 의견 조율·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등이 속출했다. 또 ‘범국민...’ 운운하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운동권의 집합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추가 파병 반대운동에서도 재현되었다.

‘냄비형 운동’을 전개한 것도 문제이다. ‘냄비 언론’, ‘냄비 정치’가 범람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운동권도 ‘냄비 운동’을 벌이는가 보다. 뜨거운 현안이 있으면 ‘냄비 언론’이 치고 나오고 운동권이 이에 대응하면

서 거리로 뛰쳐나와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듯 운동하다가 그 사안의 선포가 사라지면 냄비 식듯 금방 냉각되는 운동이 파병 반대운동에서도 드러났다.

이러 운동 대오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정보화 네트워크의 원탁형 의사소통을 즐기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국민행동>을 꾸린 운동권은 원탁형 대오를 외면하고 '냉전형 선형線型 대오'를 유지하는 냉전 세력(?)인 듯하다. 선형 대오를 선호하면 그람시Gramsci가 언급하는 진지전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국민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네티즌들이 진지전을 벌이지 않았는가.

운동 대오의 문제는 촛불시위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촛불을 드는 시위형태를 놓고 알기알부할 이유는 없으나 촛불시위는 앉아서 하는 운동형태이므로 기본적으로 정태적이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시위참가자들의 문화적 감성에 어울리는 문화행사 위주로 촛불시위가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파병반대의 정치적 메시지는 양념이 되고 춤판·노래판이 주요 메뉴가 되는 주객전도의 현상도 가끔 벌어진 것 같다. 더구나 촛불시위 현장을 기동대가 철통같이 에워싸기 때문에 경찰이 금 그어 놓은 광화문 자투리땅의 자유지대에 갇혀 촛불시위를 한 꼴이 되었다. <국민행동> 안에서 시위 방식을 놓고 '진군파'와 '농성파'로 나뉘어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촛불의 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운동의 중반전까지 촛불이 힘 있게 타올랐으나 재고양기 이후에는 깃발이 다시 나부끼기 시작했다. 운동의 전성기인 2004년 7~8월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고 촛불을 들었다고 해도 힘 있게 촛대를 쥐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촛불시위가 운동력의 한계를 드러낸 징후일 수 있고 다시 깃발의 중요성을 실감한 결과일 수도 있다.

<국민행동>은 촛불을 통한 시민연대를 추구했다. <국민행동>은 느슨한 연대와 강고한 연대의 중간쯤 되는 연대 전선을 펼친 듯하다. 그러나 운동대오가 흐트러질 때 느슨한 연대로 기우는 바람에 가맹단체 숫자보다 적은 동원력을 나타낸 적도 있다. 강고한 연대가 수직적인 조직형태로 나타나 경직

될 우려가 있지만 파병반대와 같은 긴장도 높은 운동을 전개할 때는 강고한 연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 운동과의 결합도 빠뜨릴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무효 투쟁에서 맹활약한 네티즌들은 파병 반대운동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 언론·《한겨레신문》 홈페이지 등에서 네티즌들이 파병반대의 기치를 들었으나 〈국민행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네티즌의 힘〉 사이버 범대위가 ‘파병저지 사이버 행동의 날(2003. 12. 15~16)’에 사이버 시위를 하는 등 〈국민행동〉과 함께 했으나 그 운동의 성과는 미지수이다.

이미 파병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파병 반대운동과 철군운동을 2중으로 전개해야 하는 등 운동의 과업이 증폭되어 있는데 운동의 열기는 가라앉아 있다. 8월 28일 자이툰 부대의 본대가 출국했다고 해서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는데 중도에 작파하는 인상을 주는 운동권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

결론

추가파병 반대운동을 통해 한국의 평화운동이 장족의 발전을 보인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평화운동이 다른 운동에 비하여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파병 반대운동 역시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파병 반대운동은 한국의 평화운동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운동이 용두사미로 끝나면 오히려 질곡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자이툰 부대의 선발대와 본대가 이라크로 떠난 다음 운동이 소강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1차 파병 때처럼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자마자 운동의 대오가 흐트러진 사태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국민행동>은 8월 28일 자 이툰 부대의 본대가 몰래 성남공항을 빠져 나간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면서 앞으로 '철군투쟁'에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국민행동>은 파병 반대 운동보다 철군투쟁이 몇 배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철군투쟁에 걸맞게 운동 대오를 재정비하고 운동의 작풍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파병 반대운동에 나선 모든 단체와 인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하여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한) 김재복 수사의 다음과 같은 고언을 들려 주고 글을 맺고자 한다.

“혹시…… 파병 반대운동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제가 여기 들어와 앉아 단식기도를 하는 건 그런 분위기가 매우 싫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면 큰 시민단체들은 투쟁수위를 더욱 높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동의 동력이 떨어졌지요. 우리 군대는 계속 이라크로 가고 있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시민사회에는 정보도 없습니다. 이걸 아니지요. 뭔가 해야지요(…) 반전운동이 이렇게 흐물 흐물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 잘 압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반전평화 운동가들도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평화운동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운동이 시끄러운 마이크, 확성기여서는 곤란합니다. 목소리만 크고 감동이 없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빈 메아리’에 불과하지요.” (《오마이뉴스》, 2004. 8. 28) ■

김승국 seung815@kornet.net | 현재 평화활동가로서 여러 평화운동 단체에서 활동 중. 평화전문 인터넷 신문 《평화 만들기》(<http://www.peacemaking.co.kr>)의 발행인. 《한겨레신문》 기자, 월간 《말》 편집국장, 송실대 강사(철학박사), 민족화해 자주통일 협의회(자통협) 공동의장, 통일연대 평화위원장 등 역임.